

민주당 김영록, 광폭행보에 '도마위'

TV토론 외면 의혹·지역공약 '맹탕' 불구 부산 후보와 연대 치중 김 후보 "다른 지역 후보 협약요구...선관위 TV토론회는 참여할 것"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TV토론 외면 의혹을 받고 있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의 광폭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지사 후보간 TV토론 외면 의혹을 받으면서도 경남과 부산 등 영남 지역을 오가며 정책 협약에 몰두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8일에는 구 갈갈지 시장에서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민선 7기 전남-부산 상생발전 정책 협약식'을 갖고 '남해안 경제시대'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남해안 해안관광도로·고속철도 조기 개통 ▲목포~

여수~광양~창원~거제~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로 조성 ▲상호교류와 상생협력·발전 위한 '동서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공동연구 ▲대통령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 설치·운영 추진 등 6개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행보에 대해 지역 선거권에서는 골치 아픈 시선

이다.

TV토론 불참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김 후보가 도지사가 된 것 처럼 다른 지역 자당 후보간 연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내놓은 지역 공약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더욱 그렇다.

이와관련 민주당 중앙당 장정숙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민영삼 평화당 후보의 TV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호남지역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은 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오만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 "민주 호남 토론 거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

"정책·공약은 커녕 국민의 알 권리 철저히 외면"

민주당은 30일 호남지역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TV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이라며 연일 비판에 나섰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후보들의 오만이

구태연수 후보 역시 TV 토론회에서 25분간 나 홀로 토론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지어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민영삼 평화당 후보 등 이3당 후보의 TV 토론 공동제안에 대해 3일째 묵묵부답"이라며 "당 선증은 따 놓은 당상이니 검증은 당 하겠다는 것인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이면 큰 코 다친다"고

경고했다.

장 대변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뜰이나 지방선거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TV 토론 등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민주당 일부 후보들은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변인은 전남에도 호남지역 '특정 정당' 후보들의 TV 토론 거부를 언급하며 "최소한의 후보 검증조차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사

내일부터 전국 4만곳에 지방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 안돼요"

중앙선관위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내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3층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에 벽에 부착될 후보용 포스터를 검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오른쪽), 평화외정의 노회찬(왼쪽)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6월 임시국회 관련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한국당 뻔 여야, 6월 국회 논의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장병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는 질문에 "지방선거가 있

노회찬 원내대표는 6월1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이 했다)"라고 말했다. 의장단 선출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6월1일 임시회의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달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협의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 "임시국회 소집시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 약속해야"

한국당 "신속하게 특검 추천...진상·국정조사 추진 할 것"

는데 임시국회를 어떻게 여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6월 국회를 사실상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방탄국회를 연대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6월 국회에 동의한 정당은 한국당 빼고 없다. 그래서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연락이 안 갔느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이랑 한국당이랑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며 "민주당이 한국당에서 방탄국회를 연 것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격앙돼 있는 상태라서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 저희를 만나자고 했다"고 했다.

국회의장 선출 전에 대해서는 "의정단 선출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까지 다 크게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아말로 국회 운영위원회 방탄 전문 정당"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오늘 계속 6월 국회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방탄하기 위한 국회라고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을 6월에 해도 좋지 않다는 것이면 민주당 주장과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리 "이3당 교섭단체와 신속히 특검 추천에 나설 것"이라며 "특검 방해 의도와 부실수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연루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진상조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